6 · 4이후 '이제는...'

[the300-당선인 공약 워치① 서울시장 박원순]

[6 · 4이후]이제는 공약 이행이다…박원순 시즌2, 문제는 돈!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주요 공약과 소요예산

총 예산
17조 3208 억원

■ 소요예산과 예산 중 비율 □ 주요 공약(대표공약)

도시인프라

5조 5709억원 (32%)

- 구로 · 가산, 홍대 · 합정, 상암 · 수색, 동대문, 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 마곡, 창동 · 상계, 홍릉 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 영동 · 도심 · 서남 3대 권역 국제교류 MICE복합거점 육성
- 산업 · 유통 · 일자리 · 사회적경제 등 4대 경제특구제 도입 및 확대
- 도시재생기금 2조원 조성하여 주거미래가치 및 도시활력 제고
- 신분당선 연장, 남부광역급행철도등 광역철도와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

복지

1조 9692억원 (11%)

- 환자안심병원(보호자없는 병원) 1000병상 확대 및 공공노인요양원 30개소 설치
- 어르신 재가돌봄 3-TEN (10분이내, 밤10시까지,구별 10개소) 프로젝트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
- 번호표는 이제 그만! 국공립어린이집 +1000

안전

4조 242억원 (23%)

- 환자안안심특별시 서울! 사람중심의 안전패러다임 전환
- 시민을 위한 안전지하철! 노후차량 · 노후시설 전면 교체
- 침수없는 안심서울! 34개 침수위험지구 침수피해 ZERO 추진

주택

3조 1350억원 (18%)

-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

교육 · 문화

8925억원 (5%)

- 도서관 200개 확충과 운영 내실화
-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 공연 시설 확충
- 사람중심 보행친화도시, 서울 시즌2 추진

일자리

1조 4736억원 (9%)

- 공공 사회 · 복지서비스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
- 창조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50+ 캠퍼스

기타

2554억원 (1%)

- 소상공인 보호 및 환경 공약

'박원순 시즌 2'가 막 올랐다.

2012년 보궐선거 당선 후 시정활동을 4년 연장한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약 이행을 지켜볼 때다.

임성호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재선됨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재신임을 얻었다"며 "다음 임기 시정활동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박 시장이 내놓은 공약은 크게 도시 인프라 확충, 주택공급 및 복지, 안전 예산으로 나뉜다. 대부분 시민들의 요구가 컸던 부분이지만 실현가능성을 위해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은 '예산'이다.

◇개발 계획 예산, '최소' 비용으로 측정해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거점 육성,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경전철 사업까지 대부분 지역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발 정책이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박 시장은 공약 실행을 위해 필요한 17조3200억원의 예산 중 32%인 5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이광재 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전 민선 5기가 '복지'에 편중된 공약을 내세운 반면 박 시장이 이번에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넣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 대부분의 도시 인프라 계획은 사업이 진행될 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예산, 중앙정부와 조율 중요…주택은? 글쎄...

주택공급, 복지예산은 예산 중 각각 18%와 11%를 차지한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증설, 사회복지인련 2배 확충 등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중앙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어 자체 시행 예산은 빠듯한 상태.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예산확보가 향후 박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공공주택 20만호 달성을 위해서도 재원 마련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한 채를 늘리는 데 1억5000만원이 든다고만 쳐도 10만호 건설을 위해선 1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후보는 공약에서 약 3조1000억원정도만 책정했다.

◇ 안전예산 2조...어디에 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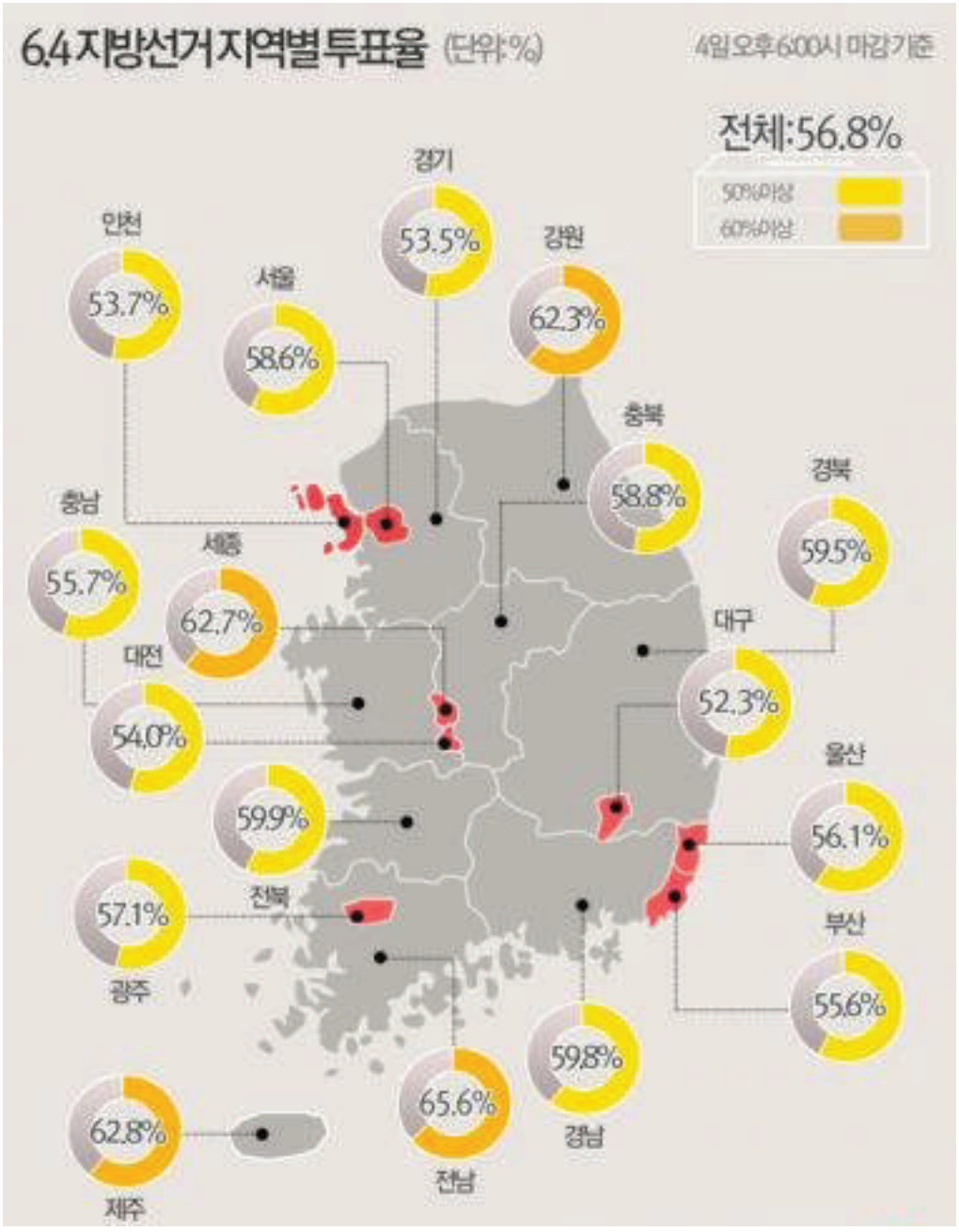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약이 '안전'이다. 박 시장도 안전 예산에 4조 이상 투입을 약속했다. 전체 예산의 23%나 차지한다.

박 시장은 이번 지하철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노후화 된 지하철 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 외에도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2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하지만 2조원의 구체적 쓰임새에 대한 계획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6.4선거][the300]세월호 정국 주도권 싸움 격화…'자웅'은 재보궐 이후로

[6 · 4이후]'심판론' · '도움론' 모두 무용…대치 첨예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중간고사 성격인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결국 어느 한 쪽의 손도 일방적으로 들어 주지 않았다. 여당은 수도권 선전과 강원 수복 및 부산 수성에, 야당은 서울 및 충청 우세에 만족해야 했다.

지방선거 구도를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심판'으로 돌린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일방적인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셈. 지방선거를 통해 세월호 정국과 당권 구도 안정을 꽤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 깊은 지역구도의 벽을 다시 한 번 실감한 채 주도권 싸움을 7월30일 재보궐 선거 이후로 넘기게 됐다.

◇세월호 정국서 더욱 치열해질 여야 공방

여야는 선거 종료와 동시에 당장 세월호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1일까지 사전조사가 진행되며 8월4일부터 닷새 간의 청문회 등 90여일간의 일정이다.

선거 전부터 국조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싸움은 팽팽했다. 여야는 2일 국조 특위 첫 일정으로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 의원들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로에 대한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사전 포석이었다.

무승부에 가까운 6 · 4선거 결과는 향후 세월호 정국에서 양 진영의 대치를 더욱 첨예하게 할 것이란 관측을 낳는다.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여당과 정권 심판을 통한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할 야당의 셈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월호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진영이 향후 구성될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양 진영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미니총선 급으로 불리는 7.30재보궐 선거에서 자웅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 역학구도 변화도 감지…與 전당대회, 野 복잡해진 당권 지형

아울러 양 당의 역학구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새누리당은 7월14일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될 전당대회를 남겨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선전하고 강원을 수복했지만 대선에서 우세였던 충청지역 패배와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참패라는 성적이 당내 어떤 계파의 손도 들어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될 당권 탈환을 위해 친박(친 박근혜 대통령) 주류와 비주류 등의 경쟁이 예고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범 민주계와 안철수 계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안 그래도 복잡했던 당내 권력 구도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셈.

김한길 · 인철수 공동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각 계파의 이해관계 충돌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가장 큰 공천 잡음을 불러온 텃밭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유장현 후보가 당선되고 여권 성향이 강한 충청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한 결과도 인정받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최소한 7.30재보궐 선거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재보선 결과에 따라 내년 초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the300]여당 리더십 교체…개각도 정국 변수

[6 · 4이후]다음은 '미니총선', 與 지도부선출도… '정치'는 계속된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계속된다. 6 · 4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당 지도부 선출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후속 정치일정에 돌입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성난 민심에 새누리당이 고전한 반면 야당의 '정권 견제론'도 완전히 여당을 압도하진 못하면서 하반기 정치상황에 불확실성을 높였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14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는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한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서청원(7선) · 김무성(5선) 의원의 대결이 확실시된다. 지방선거 결과는 두사람 대결에 영향을 미친다. 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면 김무성 의원에게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 단 새 총리 인선 등 개각 변수도 있어 당대표 경선판세를 예단하긴 이르다.

당내 리더십이 벼랑끝까지 몰렸던 김한길 ·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광주시장 선거 승리에 따라 최소한의 입지는 회복했다. 당분간 세월호 국정조사 등 대여 관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단 부산, 대구 등 기대를 모았던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벽을 넘지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안 대표에 대한 옛 민주당 구성원들의 견제와 당권경쟁은 일단 수면아래 내려가도 언제 다시 솟아오를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 수준의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다음달 10~11일엔 후보등록, 1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국회 정원은 300명이지만 의원직 박탈과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사퇴 등으로 현재는 288명이다.

두자릿수 재보선은 의미가 적잖다.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의석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원내협상 등 여야 관계도, 청와대와 국회의 힘겨루기도 그 양상이 달라진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대개 다선 중진이었단 점에서 각 지역 정치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출마하면서 10석이 한꺼번에 비었다. 서울 동작을(정몽준)을 비롯, 경기도에선 수원병(남경필) · 수원정(김진표) · 김포(유정복), 비수도권에선 부산 해운대기장갑(서병수), 대전 대덕(박성효), 울산 남을(김기현), 충북충주(윤진식),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이낙연), 광주 광산을(이용섭)이다.

경기 수원을(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 평택을(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일찌감치 의원직 상실로 재보선 지역이 됐다. 여기에 서울 서대문을(새누리당 정두언) 등 4곳 현역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중 나오면 재보선 판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은 재보선 출마가 유력하다. 임 전 의원은 평택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정몽준 전 의원은 여전히 유력한 대선주자이지만 숨고르기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방선거 · 재보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 꾸준히 입지확대를 모색할 전망이다.

[the300]세월호 후속 정책에 '포커스'…안전대책 법안만 100여건

[6.4이후]"이젠 정책이다" 김영란법 · 정부개편 등 첩첩산중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6.4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도 이제 본업인 입법 등 정책 업무로 돌아간다.

안전 관련 후속 법안 처리,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KBS 수신료 인상 등을 두고 여야는 다시 치열한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의 최대 화두는 '세월호'이다. 정부조직 개편, 안전 관련 법안 처리, 김영란법 도입 등도 세월호 이후 부상했거나 재조명되고 있는 쟁점들이다.

◇정부조직 개편 이번 주중 국회 제출…소방청 · 해경 해체는 여당 일부도 반대

지난 달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 · 4 선거 직전 입법예고돼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 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해양경기 · 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통합,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 교육 · 사회 · 문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과 소방방재청 · 해경 해산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영란법'도 후반기 과제로…'유병언법'도 논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방지법)은 공직사회 개혁 필수법안으로 부상했지만 정무위원회가 이를 전반기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후반기 과제로 넘어갔다.

공청회 실시 등 법안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과 위헌소지 관련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서 논의될 일명 '유병언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은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대책 법안 100여 건 발의

세월호 참사 이후인 4월2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제출된 100여 건의 안전 관련 대책 여야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해양심품위원회에 제출된 해양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집중 논의 대상이다. △해운법 개정안 9건 △선원법 개정안 9건 △선박안전법 개정안 6건 △해사안전법 6건 △수난구호법 개정안 3건 △선박직원법 개정안 2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100여 건의 안전 관련 국회 제출 법안 중 총 36개가 해양 관련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세월호 사고 원인 ·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승선자 확인, 선원 안전관리교육, 선령 기준, 운항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해당법안들은 상임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셈법에 따른 정국 쟁점화 가능성이 불안 요소다.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도 관심

세월호와 지방선거 이슈에 밀려 논의가 미뤄졌던 쟁점들도 선거 이후 재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 달 여당이 단독상정 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대표적. 전반기 국회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조해진 새누당 간사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연임할 전망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친박 강성'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맡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회선진화법 보완 방안도 하반기 국회의 숙제다. 주요 의결 기준을 과반에서 3/5로 높여 '식물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이 담길 예정이지만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랍 속 신세였던 '원전 마피아' 근절 법안인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안'도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원라력안전법과의 중복 규제라는 여론이 변수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 유출 손해액 추정방식과 관련한 신용정보호법과,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법안, 월드컵 중계와 직결된 지상파 재전송 관련 이용자 보호 법률, IT 및 벤처 기업 활성화 방안 등도 여야의 논의 과제에 올라 있다.